

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홍인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96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. 4. 2.

발 의 의 원 : 홍인표 의원

강성환 의원

김대현 의원

김원규 의원

김태원 의원

김혜정 의원

배지숙 의원

이태손 의원

정천락 의원

(외 찬성의원 인)

1. 제안이유

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조례의 법적근거를 변경하고,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법적근거를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함. (안 제1조)
- 나.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함. (안 제21조)
- 다. 상위법률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. (안 제3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- 나. 관계법령 : 불임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예산조치 필요 없음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6장의 제목 “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”를 “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도시녹화 및 경관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”를 “제13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”로, “도시림등”을 “도시숲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·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거리가 500미터 이상이거나 키 큰나무가 100그루 이상일 경우
3.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제24조제1항 중 “회무를 통할한다”를 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32조제2항 전단 중 “「주택법」 제29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주택법」 제49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 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조경시설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와 시민 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도시숲</u>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-----		

	제6장 <u>도시림등의 조성 · 관리심의위원회</u>		제6장 <u>도시숲등의 조성 · 관리심의위원회</u>	
제21조(설치 및 기능) ① 「 <u>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 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도시녹화 및 경관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<u>도시림등의 조성 · 관리심의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		제21조(설치 및 기능) ① 「 <u>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 」----- 제13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도시숲등</u> -----		
② (생략)				
③ 삭제		② (현행과 같음)		

④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제22조(구성) ① (생략)

②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관련 전문가

2. 3. (생략)

제24조(위원장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
② ③ (생략)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·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2.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거리가 500미터 이상 이거나 키 큰나무가 100그루 이상일 경우

3.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.

1.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2. 3.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위원장등의 직무) ① -----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③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관리대장 등) ① (생략)

② 공동주택의 조정시설 관리 책임자는 「주택법」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00. 11. 30 조례 제3450호)(개정 2007. 4. 30 조례 제 3845호)

제32조(관리대장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 - 「주택법」 제49조에 따른 ---

 -----(-----
 -----)

【관 계 법 령】

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약칭: 도시숲법)」

제13조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) ①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도와 구(자치구를 말한다)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
3.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2.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
3.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「주택법」

제49조(사용검사 등)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(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(이하 “분할 사용검사”라 한다)를 받을 수 있고,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(이하 “동별 사용검사”라 한다)를 받을 수 있다.

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·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·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. 23.>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,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.

1.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
2.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,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.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.

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